CONTENTS

| 개회사 |

김병수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4

| 환영사 |

최호권 | 영등포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6
박병규 | 광산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8
임병택 | 시흥시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고문 10
손홍기 |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12
김민석 | 영등포구을 국회의원 14
맹성규 |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 16
최춘식 | 경기 포천시 가평군 국회의원 18
최재형 | 종로구 국회의원 20

| 축 사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수성구갑) 22
정진석 | 부여 · 청양군 국회의원 24
성일종 | 태안군 국회의원 26
박덕흠 | 단원구갑 국회의원 28
조정식 | 시흥시을 국회의원 30
김태년 |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32
김경협 | 부천시갑 국회의원 34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36
소병훈 |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 38
김정호 | 김해시을 국회의원 40
송옥주 | 화성시갑 국회의원 42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국회의원 44
고영인 | 단원구갑 국회의원 46
김주영 | 김포시갑 국회의원 48
문정복 | 시흥시갑 국회의원 50
박상혁 | 김포시을 국회의원 52
윤영찬 |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원 54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56
민형배 | 광주광산구을 국회의원 58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60
이재유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62

| 주제발표 |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조영희 | 박사 이민정책연구원 67

| 토 론 |

조정훈 | 국회의원 99
나채목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 103
김태형 |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107
인요한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 111
장한업 | 이화여대 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115
김병수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김포시장) 119

| 개회사 |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김병수 김포시장입니다.

제6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이주민 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함께 주관을 맡아주신 최춘식 의원님을 비롯한 최재형, 김민석, 맹성규 의원님,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흔쾌히 토론자로 나와주신 조정훈 의원님, 더 나은 이주민 정책을 위한 현안 연구자료를 준비해주신 이민정책연구원의 조영희 박사님, 체계적인 토론을 위해 좌장을 맡아주신 김상회 교수님, 그리고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 해 주신 중앙부처의 부서장님들과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장한업 교수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눈이 파란 토종한국인 인요한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포럼에 함께하고자 방문하신 참석자분들께도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주민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인식개선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다문화 이주민 인구는 결혼이민자, 귀화자, 그 자녀를 포함해 213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5,174만명 중의 4.1%에 달하는 비율로, 집계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합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다문화'라는 개념은 결코 단순한 수치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은 모두 동의 할 것입니다. 그 간 우리 한국 사회는 '백의민족', '단일민족 국가' 등과 같은 단일통합사회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단일국가라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점차 늘어나는 이주민 인구는, 이제 그들을 수용할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노동 · 결혼 · 주거 · 복지 등 각 분야 전반에 걸쳐있는 그들의 사회, 문화권 보장을 기반으로 정착과 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임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재난지원금, 주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지원사업 등이, 이민자의 인권 증진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국인에게서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이민자와 내국인이 모두 살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단순 출입국 · 체류자격 관리,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는 노동자 유치와 활용, 이주민 사회통합과 같은 범국가적인 혁신모델을 새롭게 개척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분산돼있는 이주민 정책을 통합하고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이민 행정을 펼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포럼은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도 '다문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중심으로 상호학습, 교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이 1순위라는 생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이 이민자가 가져다주는 인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다양성을 창의성의 발전자원으로 활용하여 미래경쟁력을 갖추어 '다문화'라는 차별적인 인식조차 사라질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논의되는 제안과 정책 방향 및 제도와 법안 등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회원 도시들,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으로 행사를 빛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김병수**

| 환영사 |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국제결혼과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사회통합이 점차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 · 외국인 주민 모두가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모든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대학교, 관계기관 등이 더 나은 다문화 정책의 마련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모인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원 도시 및 유관기관 간 서로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나누고, 함께 나아가야 할 다문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포용 사회를 이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민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김병수김포시장님을 비롯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임원진분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이끌어주실 김상회 교수님과 주제발표를 맡아주실 이민정책연구원의 조영희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영등포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도시로서 다문화 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영등포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최호권**

| 환영사 |

박병규
광산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연대와 협동, 교류와 존중을 향한 정책포럼을 기원합니다.〉

'살기 좋은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이주민 정책 포럼'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에 각별한 관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서주신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님, 심도 깊은 토론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하실 조정훈 국회의원님, 법무부 김태형 체류관리과장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교수님, 이화여대 상호문화협동과정 장한업 주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포시정을 이끄는 바쁜 와중에도 내실 있는 정책포럼을 위해 힘써주신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김병수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로마제국, 미국과 유럽처럼 고대와 현대의 강성한 나라들을 거론하며 그 힘의 배경으로 다문화사회를 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 사례들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것에 미흡함이 많습니다.

해답은 문화적 차이를 서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교류하는 '다문화주의'의 정착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올바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전국 27개 도시를 아우르는 연대망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세미나, 캠페인, 정책 건의 등을 추진하며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성과들은 한국을 보다 나은 다문화사회로 이끄는 훌륭한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 그것은 지역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광산구가 민선 8기 들어 외국인주민과를 호남 최초로 신설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역이 저마다 일군 성공사례를 교류 · 확장 시킨다면 우리는 훨씬 좋은 다문화사회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디서 왔느냐보다 어디서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다양성을 위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다문화 사회를 위해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할 덕목입니다. 이번 정책 포럼이 연대와 협동, 교류와 존중이라는 다문화 정신을 더욱 널리 전파하고 구현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광산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박병규**

| 환영사 |

임병택
시흥시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고문



안녕하십니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고문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마련해주신 김병수 김포시장님, 김민석 의원님, 맹성규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 최재형 의원님, 손홍기 이민정책연구원장 직무대행님 외 관계자와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의 국가로 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성이라는 가치입니다.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경계와 제한보다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가 실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넘어 상호문화이해를 기반으로 한 공존 정책을 고안해내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인식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문화정책이 이민자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이해가 확산되고, 다름에 대해 수용하는 아름다운 시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의 출입국 · 이민관리청 상반기 설립 추진발표 역시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 내외국민의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정책 활용방안이 도출된다면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다문화 · 이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모인 오늘 포럼이 그래서 더욱 의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다문화 정책과 효율적인 정책 활용 방안'이 실행력 있는 정책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라며, 도출된 제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시흥시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고문 **임병택**

| 환영사 |

손홍기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원장직무대행) 손홍기입니다.

오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이민정책연구원이 함께 준비한 '다문화 이주민 정책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0년을 전후로 하여 이민정책, 다문화정책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에 총인구가 인구 센서스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생산인구감소와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이 본격화 되어 우리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일부 지역은 지역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 되고 있는데, 급격한 청년 인구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소비의 감소, 부동산 가격하락 그리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인구의 유출 등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 등 이민정책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2012.11월 설립이래 지역별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회원도시간 활발한 정보공유 및 다문화정책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소관부처에 제안,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21년에 MOU를 체결하고,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주민 정책 연구, 교육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오늘 외국인 주민 인적자원의 활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목표와 전략이라는 정책포럼을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고 각 지역의 외국인 대상 이주민 인력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손홍기**

| 환영사 |

김민석
영등포구을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 김민석입니다.

그간의 정책 방향은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대부분 이였다면, 외국인 주민 수가 총인구의 4%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증진을 위해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포럼을 준비해주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방면의 연구와 노력으로 과제발표를 해 주시는 토론자분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등포구도 외국인 주민 비율이 14.5%인 명실상부한 다문화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과 말씀을 나눠보면, 여전히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합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그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 ▲현재의 고령화와 출산율로 예측할 때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매우 중요함을 받아들이는 것, ▲막연하게 '안전하다'가 아닌, 현저하게 낮아지는 외국인 주민 범죄율을 만들기 위한 사전교육과 예방 정책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이 줄어들고 있으며(18년 30.9%→21년 16.3%), 이주배경청소년의 차별경험도 감소 하였고(18년 9.2%→21년 2.1%),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 · 직장동료의 차별 또한 대폭 줄어든 것(18년 9.2%→21년 2.1%)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은 고착되기는 쉽지만, 그것을 바꾸려면 몇 배의 더 많은 긍정적 자극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외국인 주민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외국인 주민들 또한 대한민국을 좋지 않은 나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포럼으로, 상호 간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오늘 논의된 고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영등포구을 국회의원 **김민석**

| 환영사 |

맹성규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맹성규입니다.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주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김병수 회장님, 이민정책연구원 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주민 관련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조정훈 의원님, 제1호 특별귀화자이신 인요한 박사님, 상호문화연구에 앞장서시는 장한업 교수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도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다문화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인천에는 남동국가산단, 부평국가산업단지 등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근무하며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단기적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해서는 기존의 받아들이는 이민에서 벗어나 함께 만들어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누구나 우리 사람으로 포용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저 또한 남동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다문화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포럼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다문화 정책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사회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에 힘쓰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 **맹성규**

| 환영사 |

최춘식
경기 포천시 가평군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최춘식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 역할」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평소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포천시와 가평군은 전국적으로 다문화 우리 이웃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중 포천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이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하고, 당당하게 우리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 모두를 위한 다문화 정책은 다각도로 논의돼야 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관을 맡은 배경도 포천과 가평을 비롯해 전국의 다문화 이웃들에게 더 큰 희망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다문화 분야 중 이민정책 및 이민청 설립에 섬세한 분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웃들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축'임은 물론, 우리 사회에 다양성의 힘을 부여해줄 원동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분야는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저출산, 인구감소 현상을 완충시켜줄 대안의 영역으로도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획기적인 정책들은 우리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다문화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노고에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경기 포천시 가평군 국회의원 **최춘식**

| 환영사 |



최재형
종로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살기 좋은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고민하고자 마련된「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주신 김민석 · 맹성규 · 최춘식 의원님과 주최해주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김병수 김포시장님을 비롯한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좌장을 맡아주신 김상회 국민대 교수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이주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이주민은 200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220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7명으로 예측되는 등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민청 신설 등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계획과 법제를 수립 · 정비하고, 전국적으로 이주민 상담 · 지원 단체를 설치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 각 지역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다문화 · 외국인 정책이 각 주무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고,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집중되어 있어 이주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도 필요하지만,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유입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이민자 유입, 체류질서 관리, 사회통합정책을 포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한다면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 지역구인 종로구도 지난해 8월 기준 외국인 비율이 8.35%나 됩니다. 종로구가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저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오늘 포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문화 정책의 현안과 과제, 사회 인식개선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 많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종로구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꼼꼼히 살펴 이주민들이 지역주민과 공존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뒷받침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

| 축 사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수성구갑)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먼저「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 역할」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21만 880명(9.9%)이며, 외국인주민 자녀(출생)는 27만 3722명(12.8%)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 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 취학률 71.5%보다 31%p 낮다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도 전체 학생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은 다문화 정책을 쏟아냈지만, 학습지도의 어려움이나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사회적 편견 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여파로 외국인 주민 수가 2년 연속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의 일손 부족 문제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 통합적이고 세심한 다문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이민청을 설립하며,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맞는 통일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도입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비자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중복 • 비효율 정책을 방지함으로써 다문화 정책을 보다 내실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인구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오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 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고민하고, 발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다문화 가족에게 따뜻한 정책 울타리를 세워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 역할」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수성구갑) **주호영**

| 축 사 |

정진석
부여 · 청양군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춘식 · 최재형 · 김민석 · 맹성규 의원님과 김병수 김포시장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는 이제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다문화 가구원은 2019년에 이미 111만명을 넘어서며,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 이웃의 행복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필수조건입니다. 대한민국에 삶의 터전을 잡은 다문화 이웃들이 상처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펼쳐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부가 다문화 이웃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다문화 이웃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상호호혜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다문화 이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하고, 당당하게 우리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부여 · 청양군 국회의원 **정진석**

| 축 사 |

성일종
태안군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본 행사의 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병수 김포시장님을 비롯한 최춘식 □ 최재형 □ 김민석 □ 맹성규의원님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각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문화가정 역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존중, 배려, 친절, 인권의 공동 가치를 지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늘의「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과 같은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어, 다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풍토가 원활히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이 개최된 것을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태안군 국회의원 **성일종**

| 축 사 |

박덕흠
단원구갑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군 지역구 국회의원 박덕흠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다문화 · 이주민 정책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이 격상하며 이른바 '코리안 드림'의 신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전의 '코리안 드림'과는 완전히 다른, 살고 싶은 대한민국, 궁금한 대한민국이 되어 외국인 주민 수를 처음으로 조사했던 2006년 이후 꾸준한 이주민 증가추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외국인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우리는 다문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13만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4.1% 수준으로 수원시(약 119만 명), 용인시 (약 107만 명)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총 외국인 주민 수가 하나의 지자체 인구수를 가볍게 뛰어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양성을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해주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6대 회장 김병수 김포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현장에서 환영받는 다문화 정책이 개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가 속해있는 충청북도 또한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약 4.5%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저 역시 이번 포럼을 계기로 다문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 번『다문화 · 이주민 정책포럼』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단원구갑 국회의원 **박덕흠**

| 축 사 |

조정식
시흥시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경기 시흥을 국회의원 조정식입니다.

먼저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포럼을 개최해주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김병수 김포시장님 그리고 이민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였습니다.

국내 다문화 가구원 수는 꾸준히 늘어 112만을 넘어섰고 이 중 결혼이민 · 귀화자는 37만 명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거주 기간이 짧은 결혼 이민자가 다수였다면 최근에는 결혼이민 · 귀화자 10명 중 4명은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등 장기 국내 체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기체류 이민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역시 단순히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 인구절벽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문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고 다문화 · 이민자 분들의 역량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통합과 포용의 자세가 곧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제6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첫 포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시흥시을 국회의원 **조정식**

| 축 사 |

김태년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주민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서주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3배 이상 증가하여, 2021년 기준으로 약 2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생 · 고령화로 인구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률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다문화 이주민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정책은 결혼 이민자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 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체류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이민정책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6대 회장도시 선출 이래 처음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거주 외국인 수가 2만 5천명을 넘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사회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주신 만큼 다양한 전략과 해법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귀 기울여 듣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정책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김태년**

| 축 사 |

김경협
부천시갑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이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다문화의 도시, 부천시 갑 국회의원 김경협입니다.

먼저,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숙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애써주시고 이번 포럼을 주최해주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김병수 시장님, 그리고 손홍기 이민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이민정책연구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다문화 가구원 수는 112만 명으로 수원시 인구에 버금갑니다. 저희 부천시도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17%나 됩니다.

이처럼 다문화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결혼이민자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또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 일변도의 정책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이주민들에게 한글과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며 우리 문화에 녹아들기를 유도했다면 요즘에는 우리가 먼저 각 나라들의 고유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등 이주민들과 어울려 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지역위원회에서도 산하에 다문화위원회를 두어 부천시와 함께 지역 내 이주민들이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에서 지역민들을 직접 마주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런 포럼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실장님, 좌장을 맡아주실 김상회 국민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부천시갑 국회의원 **김경협**

| 축 사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다문화 이주민 정책포럼〉 이 성황리에 개최되어 매우 기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님 및 손홍기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님과 주관해주신 김민석, 맹성규, 최춘식, 최재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며 인구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인구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지만 인구문제에 대한 해법이 단기간에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문화 · 외국인 정책이 국가의 중요 의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 · 외국인 정책에 교육, 문화, 생활, 사회적 시선 등 분명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 외국인 정책은 지역적 특성이 다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는 포용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지역 특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자리해주신 여러 의원님 및 단체장님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사회, 상생하는 공동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

| 축 사 |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으신 김상회 국민대학교 교수님, 발표자이신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님, 그리고 모든 토론자들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다문화가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다문화가족은 약 112만 명으로 최근 5년간 15만 5,466명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어 이 같은 다문화 이주민의 유입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도 2021년 12월 기준 10,936명의 외국인 인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정기적으로 광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오늘 포럼 주제인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이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대 국회에서 다문화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제정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과 시켰고 지금까지 꾸준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정책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이주민 유입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조사 · 연구도 존재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안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과 관련된 한 기관으로 통합하거나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에서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사업과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주민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 **소병훈**

| 축 사 |

김정호
김해시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해시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다문화 이주민 정책의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이 열린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논하는 자리로 이주민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집중되어 있어, 각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다문화정책의 담당 기관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등으로 분절되어있어, 이를 실행하는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하려고 해도 상급기관이 모호해 시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서 좋은 혜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또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중 경상남도 기초지자체는 김해시가 유일합니다. 김해시는 경상남도 전체 외국인주민인구 12만명 중 24%를 차지하며, 18개 시군 가운데 김해시가 가장 많습니다. 김해시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전체 5.4%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명실공히 다문화도시입니다.

특히, 김해는 젊은 다문화도시로 전체 다문화인구 중 9세 이하는 20%, 10~19세는 12.6%로 점점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지고, 30~40대가 40%로 다문화 인구는 김해의 미래이자 역동적인 김해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인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에 따라 김해시는 생애주기별 다문화교육, 학령기 자녀 지원 등 새로운 유형의 다문화 인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제가 있는 김해시가 고민하는 다문화 정책을 한 단계 높여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저 역시 오늘 논의되는 고견을 경청하여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분들과 참석자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김해시을 국회의원 **김정호**

| 축 사 |

송옥주
화성시갑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경기 화성(갑) 출신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송옥주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김민석, 맹성규, 최춘식, 최재형 국회의원님과 김포시장님을 비롯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는 뜻깊습니다.

인구위기의 대안 중 하나는 '인구 이동 정책'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인구 이동 수단인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협력 활동을 이어 온「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경험은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소속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전체 외국인은 62,542명(′21년 기준)으로 22,110명(′21년 기준)의 외국인근로자, 22,613명(′21년 기준)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다문화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화롭게 어울릴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다문화 가족을 위한 화성가족통합센터 예산확보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 시행 등 다양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힘써왔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다양한 구성원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화성시갑 국회의원 **송옥주**

| 축 사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국회의원 한병도입니다.

〈다문화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포럼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원 그리고 김병수 김포시장님을 비롯한 회원도시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이주민 인구 유입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인구 문제 타개를 위한 주요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다문화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다문화、외국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 개발을 목표로 개최되는 오늘 포럼은 더욱 뜻깊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다문화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평등하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국회의원 **한병도**

| 축 사 |

고영인
단원구갑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다루게 되어 뜻깊습니다.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을 위해 국회를 찾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환영 인사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이주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안산은 104개국 8만 1천여 명 외국인의 둥지입니다. 저마다 '코리안드림'을 가슴에 품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여 살다 보니 이주민과 원주민이 각자 겪는 고충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 상처를 입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이주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입니다. 함께 사는 이웃이기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문화 정책의 과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는 없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대안도 필요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이 다문화 정책의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주민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 등의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다문화는 어떻게 가꾸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과 나라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제시될 고견에 귀 기울이며 다문화정책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차별없이 함께 잘사는 공동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단원구갑 국회의원 **고영인**

| 축 사 |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6대 회장도시로 선출된 이래 첫 행사로써 주최하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활한 다문화 정책추진을 위해 정책포럼을 주최해주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원, 행사를 주관해주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님, 좌장을 맡아주신 김상희 국민대학교 교수님,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포시는 1998년 4월 1일 김포군에서 김포시로 승격된 이래 25년 만인 2023년 2월 1일부터 50만 대도시로 승격되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온 김포시는 곧 다양성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50만 명이라는 인구 안에는 전국 각지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가정도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는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과 가까워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유인할 요소가 다양합니다. 기존 다문화가족들의 생활기반으로도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도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회장도시로 선출된 만큼, 기존 외국인 주민과의 통합 제고는 물론 새롭게 유입될 다문화가정과의 화합 추구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포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11월 말 기준 연초보다 약 15%나 증가했습니다. 김포시 내국인 인구가 감소와 소폭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데에 비하면 일관적인 증가 양상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원이 없었다면 김포시의 50만 대도시 달성은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김포뿐만이 아닙니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1년 말 기준 200여만 명에 이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다문화가구수도 2021년 기준으로 약 35만 가구에 달합니다.

지역의 다양성 강화와 상생 • 공존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출생 • 고령화 • 지방소멸이 인구재난으로 닥쳐오고 있는 지금,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가정은 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갈 인적자원임이 분명합니다.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더욱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이민정책을 시행해가는 길에 우리 김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정책 포럼에서 제시될 고견과 제언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김포갑 국회의원으로서 함께사는 세상,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더 큰 김포를 만들어갑시다.

2023년 2월 21일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 축 사 |

문정복
시흥시갑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소중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의원님들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및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좌장을 수락해주신 김상회 국민대 교수님과 기조발표를 논해주실 조영희 이민정책 연구원 연구교육실장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고질적 사회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다문화 이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지역융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민의 유입 증가와 정착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가족을 따라 이주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아동과 청소년의 비중이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은 물론 사회 인재로 양성하는 데 있어 우리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인식에서 비롯된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사회 구조적 격차와 소외를 겪지 않고 우리 사회에 잘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교육지원과 자녀 학교 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 일상 속의 차별을 개선하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시킬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포럼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논의된 고견들을 귀담아듣고 성숙하고 통합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시흥시갑 국회의원 **문정복**

| 축 사 |

박상혁
김포시을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와 조화롭게 융화되고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 순혈주의를 고수할 수도 없고, 그 가치가 현실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교류하며, 문화와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포시는 전체인구의 6.4%가 외국인 주민으로, 농촌의 초기 결혼이민자, 산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동포, 난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모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외국인 주민의 축소판입니다.

그에 비해, 분명한 구성원인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도 정확히 되어있지 않고, 지원 또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국인주민을 '남이 아닌 '우리'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일「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 역할」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며, 부처 간 협력, 정책방향 설정 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모두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2월 21일

김포시을 국회의원 **박상혁**

| 축 사 |

윤영찬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다문화이주민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김민석 의원님, 맹성규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 최재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사를 공동주최해 주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도 응원과 감사를 드립니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13만 여명에 달합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도 4.1%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문화 • 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기준인 5%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외국인주민과 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을 중시해 왔고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던 만큼,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서비스, 학교, 문화시설 등, 사회의 각 요소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적과 인종에 따른 편견과 차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콘텐츠 속에,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 속에, 서로 다름을 배척하고 외국인과 특정인종을 차별하는 시각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지, 경각심을 갖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문화를 함께 즐기고, 한국사회 속에 어울리고자 하는 외국인시민이 늘어가는 만큼, 그들과 공존해야 할 우리 사회의 수용성과 포용성도 향상되어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했지만, 이는 장기 거주 혹은 영주가 기대되는 이주민의 '장기 정착'을 전제로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한국을 찾고, 거주하길 원하는 다양한 외국인들을 포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주민'에 대한 정의조차 각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인 상태에서, 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통합적이며 포용적이며, 효과적인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개성과 차이를 감안하고 대한민국을 향한 그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 정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 이주민의 전체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주민 정책의 컨트롤타워도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인정한 사실상의 선진국이며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런 우리사회와 우리 국민이 좀 더 성숙하고 포용적인 세계시민이 될 수 있으려면 시민의 의식개선과 함께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한발 앞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정책의 기반이 될 여러분의 통찰과 고견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책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윤영찬**

축 사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제6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첫 공식행사인 다문화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사회를 만들 수 있게끔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신 협의회 관계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 인구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그 자녀 30만여 명을 포함하여 16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 년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 인구와 이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요로 인해 다문화 관련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 체계도 매우 빠르게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광산구 역시 국내 최대 고려인 집성촌이 있고, 고려인 동포와 이주노동자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광산구청은 체계적인 지원 · 관리를 위해 전체 광주광역시 5개 구청 가운데 최초로 '외국인 주민과'를 신설, '고려인 마을 활성화 팀'을 별도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의 수가 2만 2,859명으로 전체 구민의 5%로 2009년 이래로 연 평균 0.3%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다문화 도시입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기관과 회원도시, 관련 기관의 전문가 간의 행정, 정책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6대 부회장 도시 광산구의 국회의원으로서 경쟁력 있는 다문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 협업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로 다문화 도시를 선도하는 각 기관의 뜻을 모아 지역의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 초기 정착 및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과 같은 관심 어린 지원 정책 발굴로 조화로운 다문화사회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이용빈**

| 축 사 |

민형배
광주광산구을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민형배입니다.

'다문화 이주민 정책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합니다.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행사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조영희 박사님과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인, 다문화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닙니다. 2020년 외국인 주민통계에 따르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11곳입니다. 5% 이상인 지자체는 46곳에 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외 왕래가 주춤해졌는데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13만 명에 이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입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는 5,5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합니다. 멋들어진 고려인마을이라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구청장 때부터 소통했기 각별한 애정이 큽니다. 여러 지원사업과 자립역량 강화를 추진했는데, 개별 자치단체만으론 어렵습니다. 광산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으로 함께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이유라 봅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여러 정책이 미흡합니다.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여럿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복지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민청 설립을 두고 외국인을 도구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아쉽습니다. 외국인을 상생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부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사법은 어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입법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포럼에 모인 소중한 고견들, 잘 살피겠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차별 없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살아가는 모두에게 사랑과 정이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다문화 이주민 정책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2월 21일

광주광산구을 국회의원 **민형배**

| 축 사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마련한 다문화 이주민 정책포럼이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찾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럼을 준비하신 김포시를 비롯해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석, 맹성규, 최춘식, 최재형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익히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지만 해소방법은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타협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사회적으로 융합시키기 위한 다문화 정책도 사회통합적으로 실행되어야 실효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회통합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적용될 때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주정착을 비롯해 인적자원 활용과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변화 등의 정책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범주도 단일한 법적 근거를 통해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을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포용도시가 되고, 개방도시가 되고, 글로벌 도시를 지향해 나아갈 때 보다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도 다문화 가족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유학생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품는 다양한 통합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 지원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도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더불어 사회통합적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다문화 이주민 정책 추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기대합니다.

2023년 2월 21일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 축 사 |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반갑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원, 김민석, 맹성규, 최춘식, 최재형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병수 김포시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실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12년 최초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창립된 후 10여 년 동안 정책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간 국내 체류외국인은 '12년 약 140만 명에서 '22년 말 22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유학생, 동포,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의 급증(약 45만 명→100만 명) 등 질적인 구성도 변화하여 이제 외국인 주민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지자체의 인구소멸 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에서는 외국인을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주민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추어 출입국 ·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되고 신속한 출입국 · 이민정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러한 시점에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지역의 인구 위기와 외국인 주민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논의되는 이 주제들이 정부의 출입국 · 이민정책 추진에 귀중한 정책제언이 되고, 학계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 I /

제 1섹션 발표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조영희
박사 이민정책연구원



Ⅰ. 논의 배경 : 지역인구와 인적자원으로서 외국인주민 인식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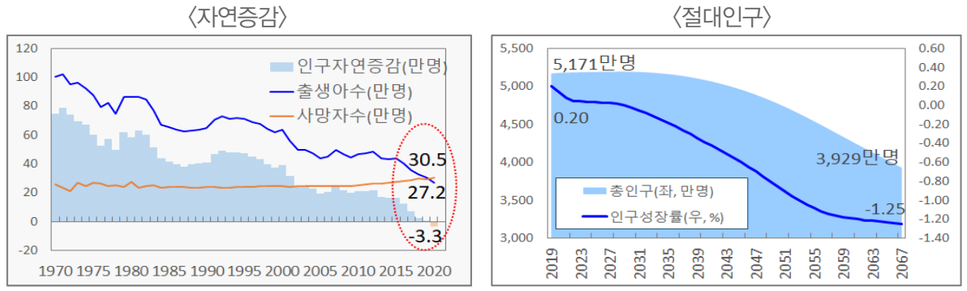
대한민국에서 인구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이에 모든 분야의 국가 정책들이 전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인구문제로 인한 국가경쟁력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문제에서 인구감소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구구조의 '중장기적'변화이며, 그러한 변화로 인한 파급효과는 전국적 수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 불균형의 심화'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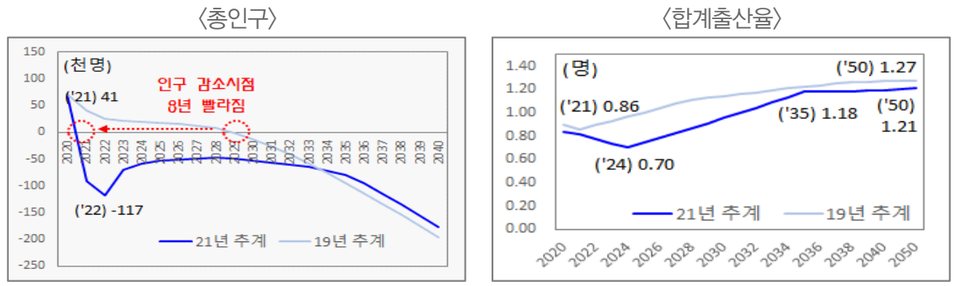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아젠더로 인구문제, 즉 인구의 확보와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전통적인 인구정책으로 해소되지 못한 어려움을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 즉 이민자(혹은 장기체류 외국인)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연구와 정책 개발 차원에서 매우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발표와 토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위기

통계청의'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인구 자연감소가 3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총 인구수는 2028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년~2067년)에서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67년이 되면 -1.26%의 인구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저위 추계(낮은 출산율, 기대수명, 국내순유입)를 적용하면 2019년부터 총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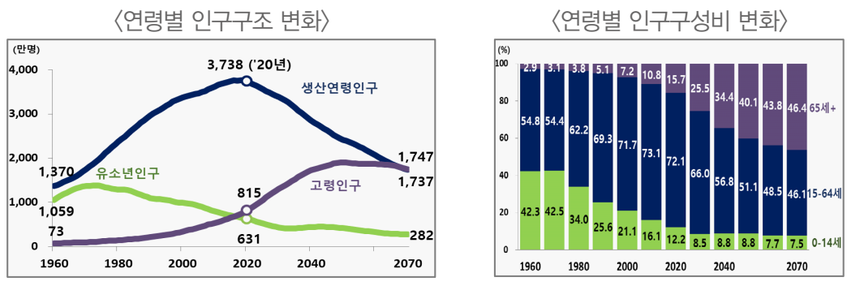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p.12.



주: 19년 추계는 특별추계이며, 21년 추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래인구추계(2020~2070, 통계청)를 말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 p.1.

〈그림 3〉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전망(1960~2067)



자료: 기획재정부(2021). '21년 장래인구추계('20~'70년) 분석. p.2.

고령사회로의 진입도 예상보다 빨리 진전되어 2017년 770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827만 명에 달해 2017년 13.8%였던 고령인구 비율은 2076년에는 46.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비해 생산가능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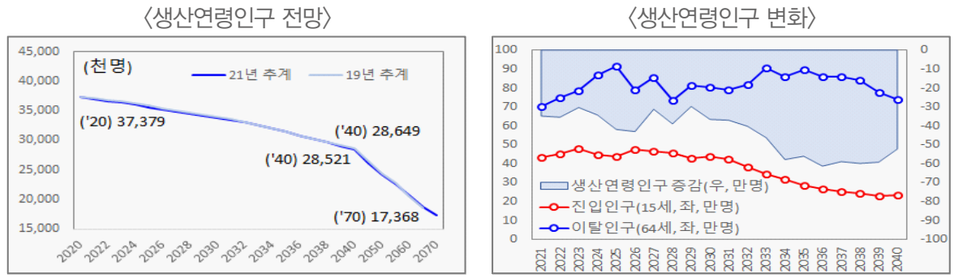
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25년)에 직면(관계부처 합동, 2019)하고 있다. 베이비부머('55~'63년생, 710만 명)의 고령층 진입이'20년 시작되어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 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가 과거와 달리 가속화 국면에 진입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출산율 반등 가능성은 점차 하락(관계부처 합동, 2021)하고 있다.

장래인구추계('20~'70년, '21년 12월)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총인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건 수의 대폭 감소와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인구 국제 순이동도 크게 감소하여 총인구의 감소 시점이 기존 전망[1]보다 8년 단축('29년 → '21년)되었다. 합계출산율은 코로나19 인한 혼인감소가 향후 3~4년 출산율 감소에 영향 미쳐 기존 전망1보다 최저점은 기존보다 18.6%(△0.14명) 하락(0.86명 → 0.70명)하였다. 생산연령인구는 매년 30~40만 명씩 감소하는 데 특히 향후 5년 생산연령인구는 17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전망보다 감소 폭 확대(25만 명)되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부양비, 즉 고령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은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분야를 위시로 한 국가재정구조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다(설동훈 2015).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이후 이러한 인구변동에 대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인구학적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담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1 기존 전망은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2019년에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를 공표('19년 3월)하였으며, 장기재정, 연금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67~2117년의 인구추계도 제공

〈그림 4〉 생산연령인구 전망



주: 19년 추계는 특별추계이며, 21년 추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래인구추계(2020~2070, 통계청)를 말함.
자료: (좌측) 기획재정부(2021). '21년 장래인구추계('20~'70년) 분석. p.4.
(우측) 관계부처 합동(2022).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 p.2.

이러한 가운데, 인구위기는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50.1%)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였고, 비수도권 청년층(20~30대)의 유출 심화로 인해 지역 간 인구 격차와 지역 불균형 이슈 대두되었다. 지난 10년간(2000~2019)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순유출과 중장년층의 순유입이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된 청년 3명 중 1명은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예술, 2022:27).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동은 결국 지방의 일자리·교육수요 등의 구심축이던 도시는 물론이고, 만성적인 인구 감소를 겪어온 농어촌 지역의 소멸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본질은 청년층, 특히 핵심 노동력 연령층(25~49세)의 급감과 초고령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이며, 그 변화의 파급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불균형하게 나타나 비수도권 지역 소멸의 위기국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청년 인구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등 부동산 가격하락과 1인 가구 및 빈집을 증가시키게 되며, 대학교 특히 지방대학교의 통폐합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전국적으로 소멸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선 지역이 16.6%에 달하며, 소멸고위험 지역은 13.2%에 달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란 지역공동체의 세대 간 불균형과 미래 지속가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 간의 비율로 산출한다. 양자간 비율이 0.5 미만일 경우,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현재의 경로를 그대로 따른다면'해당 공동체의 인구 기반은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진입지역(0.2~0.5미만)과 소멸고위험지역(0.2 미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1〉 인구 위기의 심화 시나리오

		2017년	현재출산율 가정		
			2047년	2067년	2117년
소멸위험 낮음		16 (7.0)	0 (0.0)	0 (0.0)	0 (0.0)
보통수준		62 (27.1)	0 (0.0)	0 (0.0)	0 (0.0)
주의단계		68 (29.7)	0 (0.0)	0 (0.0)	0 (0.0)
소멸위험	진입단계	71 (31.0)	72 (31.4)	13 (5.7)	8 (3.5)
	고위험	12 (5.2)	157 (68.6)	216 (94.3)	221 (96.5)
전체		229 (100.0)	229 (100.0)	229 (100.0)	229 (100.0)

출처: 이상호(2022)

위와 같은 인구위기 시나리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위험의 미래는 대단히 암울하다. 감사원(2021)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에는 전체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 되고, 소멸고위험지역은 약 70%(157개)에 달한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현재 시점에서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 소도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지역의 위기는 비단, 만성적인 인구유출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문제만은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현 입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발전특별법안을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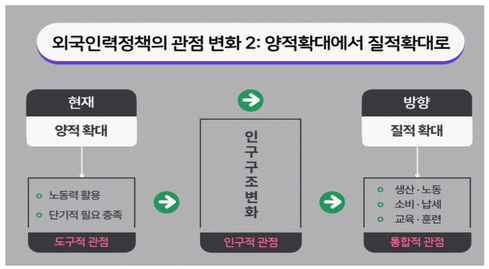
법화하였고, 정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선정 및 지원(행안부), 비수도권 지역혁신성장계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자체-대학 협력 지역혁신사업계획(교육부)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화의 가속화에 따라 스마트 공정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단순노무 분야에 인력수요가 줄 수 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핵심 노동력 연령층의 급감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인구의 활용 필요성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실제 산업단지를 배후로 하는 지방 중소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기존에 작업환경이 열악했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지역산업단지에서도 인력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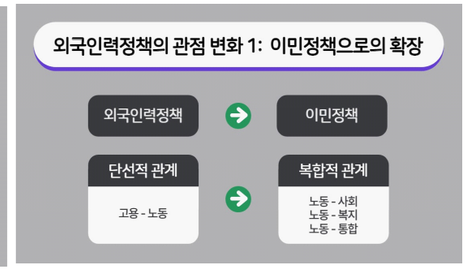
2017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의 4차 산업화'를 제시하면서 인구감소 및 지역 불균형에 대한 대응으로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할 것이 강조되었다(창조경제연구회, 2017).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발전 및 이를 통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지역산업단지의 제조업체를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이다.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바뀌면서 바닥의 기름때나 메케한 냄새가 없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주된 업무도 단순반복적인 육체노동보다는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업무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공장의 고용주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의 기존 산단 배후 도시들이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 산단의 ICT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나, 한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이라도 고용하지 않으면 스마트공장 운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이창원 외, 2022).

이와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 전체와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인구 요소인'인구 이동'특히 국제이주에 관한 복합적 문제(도입, 관리, 활용, 지원과 통합)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이민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림 2〉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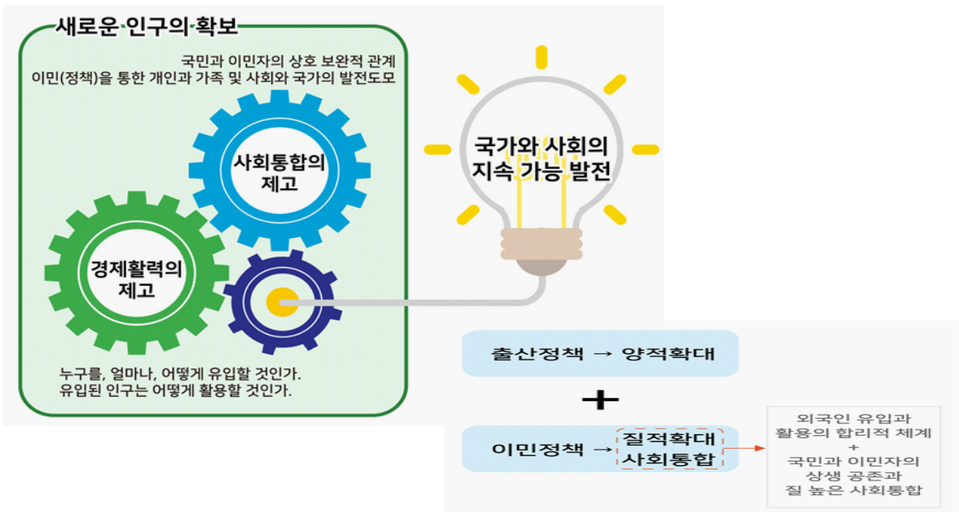


〈그림 3〉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정책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관점에서 본 지자체 외국인주민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생산과 노동, 소비와 납세, 교육과 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주민으로서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그림 4〉 이민정책을 통한 지자체 '생활인구'확보



Ⅱ. 논의 쟁점

1. 균형적 정책관점의 확립 : 다문화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

지난 15년간(2008~2022) 정부는 장·단기체류외국인을 가리켜 외국인주민, 이민자, 이주배경주민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의 용어도 다문화정책, 이민정책, 사회통합정책 혹은 이민통합정책 등으로 혼용되어 왔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듯이, 실제로 지자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유형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결혼이민자에 편중된 다문화정책 프레임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 외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이 정교하게 발전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표 1〉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구분	외국인주민 합계(①+②+③)			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② 한국국적 취득자	③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계	남	여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21년	2,134,569	1,090,073	1,044,496	**1,649,967**	395,175	174,632	156,607	368,581	554,972	**210,880**	**273,722**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51.1%)	(48.9%)	**(77.3%)**	(18.5%)	(8.2%)	(7.3%)	(17.3%)	(26.0%)	**(9.9%)**	**(12.8%)**
'20년	2,156,417	1,117,399	1,039,018	1,695,643	455,287	173,756	142,569	345,110	578,921	199,128	261,646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51.8%)	(48.2%)	(78.7%)	(21.1%)	(8.1%)	(6.6%)	(16.0%)	(26.8%)	(9.2%)	(12.1%)
증감	Δ21,848	Δ27,326	5,478	**Δ45,676**	Δ60,112	876	14,038	23,471	Δ23,949	**11,752**	**12,076**
	(Δ1.0%)	(Δ2.4%)	(0.5%)	**(Δ2.7%)**	(Δ13.2%)	(0.5%)	(9.8%)	(6.8%)	(Δ4.1%)	**(5.9%)**	**(4.6%)**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 10.31)

특히 〈표 1〉에서 보듯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의 비중이 높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정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는 지난 15년 간 지자체가 〈다문화가족기본법〉과 이법에 근거한 매 5개년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및 가족에 편중된'다문화정책'을 추진하기에도 부족한 구조적 한계(역량)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 전담부서가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차지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외국인주민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간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위임사업 혹은 그와 유사한 자체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기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1〉은 2011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설치 안이며, 실제로도 지자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족에 집중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 업무는 다문화가족 담당부서에 집중되어 있어서 최근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력 활용에 관한 지자체 정책업무는 지자체 조직 내에서 명확하지 않다.

〈그림 1〉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설치 계획(안)



전담부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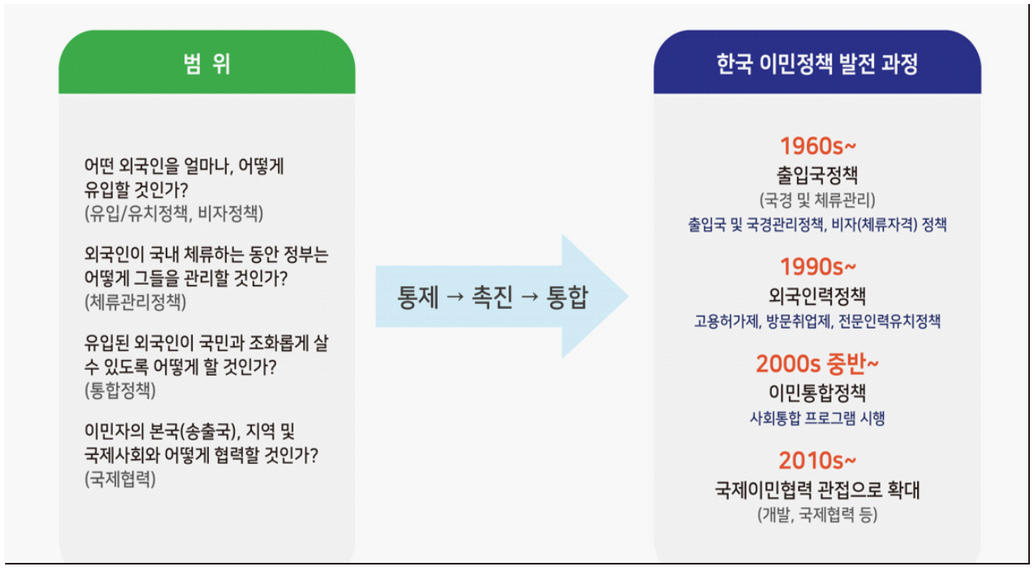
○ **시.도**
- 외국인주민수 **5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2.5% 이상 시.도(6개)** ⇒ 「과(課)」 **단위(12명내외) 전담부서** 설치
- **기타 시.도** ⇒ 5급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 내외** 전담부서 설치

○ **시.군.구**
- 외국인주민 **3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10% 이상 시.군.구(6개) ⇒ 「과(課)」 단위(12명내외)** 전담부서 설치
- 외국인주민 **1만 ~ 3만명** 또는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5 ~ 10% 시.군.구** ⇒ 6급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 내외** 전담부서 설치

○ **시.도 전담부서 정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
- 지역별 외국인주민수 및 서비스 유형 등의 특수성 반영
- 기존 **외국인정책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당해 **정원, 기능이 쇠퇴하는 부서**의 **인력 이체,활용**

○ **시.군.구 전담부서 정원**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감안, **외국인주민수 2,500명을 기준*으로 1명씩 산정하여 책정**
*근거 : 시군구 외국인주민 지원 공무원 1인당 평균 외국인주민수 2,507명
- ' 11. 12월까지 기준에 따른 정원을 책정, **5명 이상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13.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보**

그러나 인구와 경제의 관점에서 외국인주민을 바라본다면, 기존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국한된 다문화정책 프레임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민정책으로의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존의 다문화정책으로 명명되는 지자체 외국인주민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수용'할 것이고, '활용'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국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민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을 지자체 정책에서 포섭하기 위해서는 균형적 정책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서 말하는'균형'은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그림 4〉 지자체 외국인주민 정책 재설계를 위한 균형적 이민정책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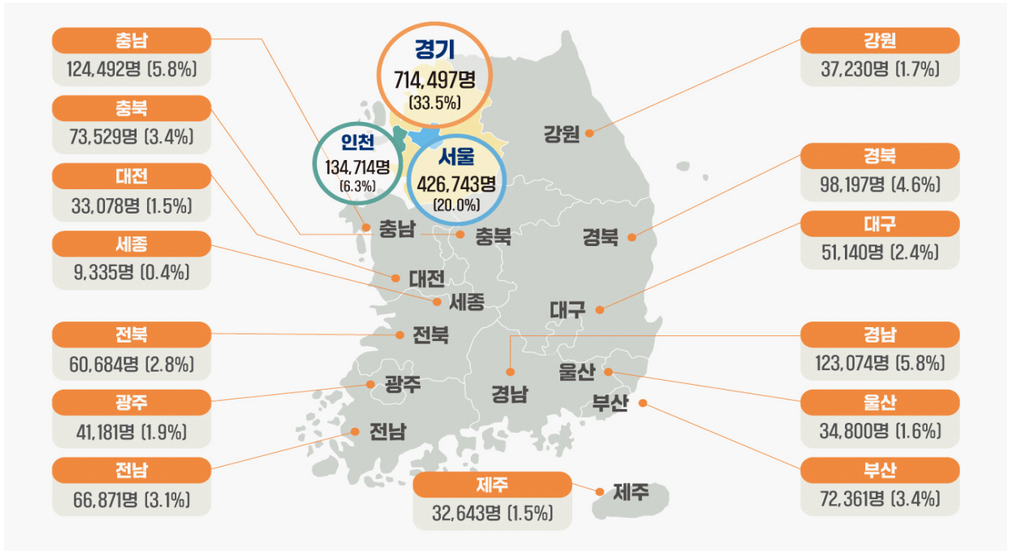
이와 같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자체가 이민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는 외국인주민의 '유입/유치-〉 체류관리-〉 초기적응-〉 사회통합'의 다양한 정책분야들과 전통적인'지역정책'(고용, 교육, 복지, 사회참여, 인권보호 등)은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외국인주민의 본국인 송출국, 지역(region) 및 양자 · 다자적 국제협력에 대한 지자체 외국인주민 정책의 역량 제고도 중요해 질 것이다. 이같이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정책의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민사회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기 된다[2]. 지자체 외국인주민 정책은 기존의'다문화정책'프레임을 정리하고'유입-체류-통합'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광의의'이민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2.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의미

인구 관점에서 보면, 지역수준에서의 이민정책의 개발과 추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년 간 내국인인구는 급감하여 인구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급 지자체에서 외국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행안부 외국인주민통계를 보면, 매년 각급 지자체(광역, 기초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의 인구밀도가 점점 더 높아져 이른바, '외국인밀집지역'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에서 수립된 전국단위의 이민정책이 지자체에서 하향식으로 추진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2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 ·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 · 이민관리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립하겠다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인구소멸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덕수 총리는 이민청 설립안을 지지하였으며, "외국인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털어야 할 때가 됐다.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인구구조에서 외국과 연대를 잘 해가면서 외국인력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전자신문, 2023. 1.31).

〈그림 5〉 외국인주민 시·도별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표 2〉 외국인 밀집지역: 광역 수준

구 분	총인구 대비 5% 이상	총인구 대비 4% 이상	총인구 대비 3% 이상	총인구 대비 2% 이상
외국인주민수 10만명 이상	경기, 충남	서울, 인천	경남	
외국인주민수 5만명 이상		충북	경북, 전남, 전북	부산, 대구
외국인주민수 3만명 이상		제주	울산	광주, 강원, 대전
외국인주민수 3만명 미만				세종

출처: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표 3〉 외국인 밀집지역: 기초자치단체 수준

구 분	인구 대비 10% 이상(11)	인구 대비 5% 이상(46)	인구 대비 3% 이상(16)	인구 대비 3% 미만(13)
외국인주민수 5만명 이상 (7)	안산시, 시흥시, 구로구, 영등포구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외국인주민수 3만명 이상 (8)	금천구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김포시, 부평구	성남시	용인시
외국인주민수 1만명 이상 (50)	안성시, 포천시, 음성군, 서울 중구, 진천군	김해시, 관악구, 광산구, 연수구, 동대문구, 광진구, 광주시, 오산시, 경주시, 용산구, 서대문구, 경산시, 양주시, 이천시, 종로구, 울주군, 서귀포시, 당진시	군포시, 제주시, 거제시, 동작구, 미추홀구, 성동구, 남동구, 인천 서구, 파주시, 마포구, 군산시, 달성군, 성북구, 양산시, 청주시	달서구, 유성구, 안양시, 창원시, 천주시, 고양시, 포항시, 서울 강서구, 의정부시, 강남구, 남양주시, 송파구
외국인주민수 1만명 미만 (21)	영암군	논산시, 통영시, 여주시, 칠곡군, 완주군, 동두천시, 보령시, 영천시, 함안군, 예산군, 창녕군, 금산군, 완도군, 성주군, 부산 중구, 고령군, 진도군, 창성군, 고성군, 의령군		

출처: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 순서 배열기준 : (1) 외국인주민수, (2) 인구 대비 비율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정책이슈는 지역마다 특성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기반 이민정책은‘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이민자 유입, 체류질서관리, 사회통합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지역별 특성에 따른 외국인주민 정책 개발의 차별성

지역 / 특성	A지역	B지역	C지역
규모	중소도시	대도시	소도시
위치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외국인 유입 요인	공단	상업지구, 대학교	농업지대, 공단
외국인주민 구성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외국계주민자녀, 결혼이민자 순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주자, 유학생순	외국계주민 자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순
외국인주민 비율	6.9%	2.6%	8.5%
외국인주민업무 전담부서	가족여성과	없음	복지여성과
지역 특성	이웃지역의 외국인주민 거주지 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형성된 **신흥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국제도시로 발전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으며, 1990년대 국내 외국인유입 급증 시기 이전에도 거주 외국인이 많던 지역	**전국에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외국계주민 자녀와 외국인근로자가 많음

더욱이 인구위기가 지역소멸위기로 가시화되면서, 과거와 다른 수위로 수도권과 지방의'균형적 발전'이 더욱 시급한 정책현안으로 부상하였고, 의회와 정부에서 관련한 입법과 정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지역의 역할과 관여 범위에 대한 이민정책은 현 시점에서 추상적이기보다는 매우 현실적인 이슈가 되었다. 지역 내에서 외국인주민의 인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차원의 이민정책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착과 통합에 관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방지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유입하며, 유입된 외국인주민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내 정착과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도 추진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이민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 중장기적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주민은 '인력'의 개념을 넘어 '생활인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앙집중적 통치방식을 한 번에 분권적 통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민정책에서 지역의 관여 수준을 설정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현실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역대 정부와 새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3에서 지역 차원에서의 이민정책은 중앙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반으로 해야만 현실 타당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차원에서의 국가이민정책과 지역차원에서의 이민정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앙-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근 몇몇 광역지자체에서 비자발급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외국인의 유입 규모를 결정하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벗어난다. 이민정책의 절차적 측면, 즉 비자정책을 지자체에 일부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비자정책은 국경관리를 관할하는 중앙부처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어떤 외국인을 얼마나 유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에 실제 지역의 수요가 정확히,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결정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지역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이 미치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분석이 축적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증거기반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의 이러한 수요 파악과 실태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가'지역'이라는 공간 속에서 더 또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다양한 산업, 인구 특성과 맥락이 잘 반영되도록 유입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인력부족과 인력수요가 지역별로 달리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외국인력의 공급체계에서 지역의 상황과 맥락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고, 공급된 외국인력의 관리와 활용 및 지원과 통합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미했던 점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전히 중앙집중적 행정체계의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에서'지방정부의 역할론'만 강조한다면, 외국인력 유입체계 논의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 특히 계절근로자제도를 제외하면 그 동안 지자체는 중앙정부 주도로 공급되는 외국인력에 대한 지역의 정확한 수요 파악도 축적되어 있지 않았고, 외국인력의 지역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생활인구'로서 그들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의 접근이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법무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지역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실험대가 될 수 있다. 새 정부의'지방시대'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이민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지역특화형 비자'와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지방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한 연방제 국가형태임을 고려해 볼 때, 중앙집중적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이민정책 가능성에 대한 실험일 뿐만 아니라, 이민정책에 관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의 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민정책 분야를 넘어 새 정부의'지방시대'구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89개의 인구소멸위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 수준에서 인구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사업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기반 이민정책이란, 지자체가 지역의 일자리 정책이나 도시지역개발정책, 인구정책 등을 수립할 때 내국인만 대상으로 국한하지 말고, 외국인주민의 신규유입과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적자원 활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과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의 연계는 매우 취약하다.

〈그림 7〉 지자체의 기존 정책분야와 외국인주민 정책의 연계

	<정책유형> 이민정책대상	유입·유치 정책	체류관리 (사회통합 전 영역 연계)	초기적응 초기적응	사회통합 노동시장통합 (고용)	사회통합 교육	사회통합 복지 (포용)	사회통합 사회참여 (시민권)	사회통합 인권(문화다양성) 수용 및 인식개선	국제협력 (송출국/지역/국제기구)
단기 순환형	단기방문(관광객)	유치	○							
	투자자	유치	○							
	단순기능인력	유입	○	○	●	●	●	●	●	○
	전문인력	유치	○	○	●	●	●	●	●	●
	외국기업 주재원	-	○	●	●	●	●	●	●	●
	유학생	유치	○	○	●	●	●	●	●	○
	제외동포	유입/유치	○	○	●	●	●	●	●	○
	난민	유입	○	○	●	●	●	●	●	●
	결혼이민자(가족)	유입	○	○	○	○	○	○	○	○
정주형	영주자격자		○		○	○	○	○	○	●
	이민배경자녀 - 해외/국내 출생				○	○	○	○	○	○
	일반국민 (이주배경국민)								○	(○)

● : 국내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는 정책

앞으로 지자체 수준에서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외국인주민을 고려하는 정책이 내국인 대상 정책과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지자체 외국인주민정책은 더 이상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및 가족에만 초점을 둔 다문화정책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을 그들의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권리와 의무에 맞게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및 행정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현실

전국적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민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년 간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정책협력 활동을 이어 온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경험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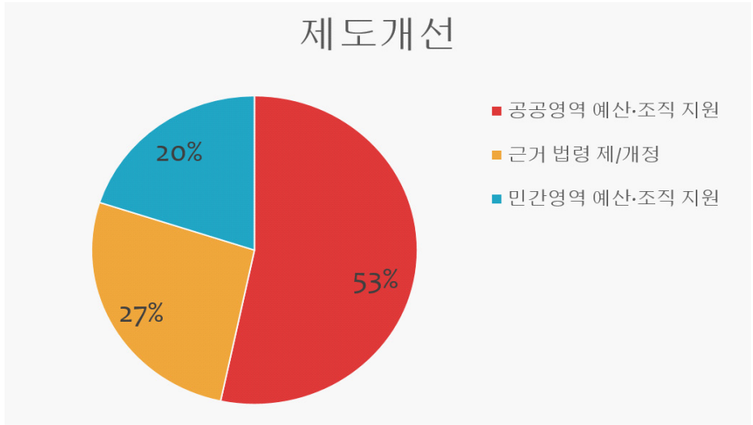
2012년 3월 서울시 구로구청,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제안하여 창립된 동 협의회는 유럽의 다문화도시협의회를 모델로 삼아 국내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지자체 간 외국인주민 정책 협력의 장이다.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정책 협력 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지원,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 과정 참여 등 5개 분야이다. 외국인주민 수가 1만명을 넘은 밀집지역 중 현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구는 총 27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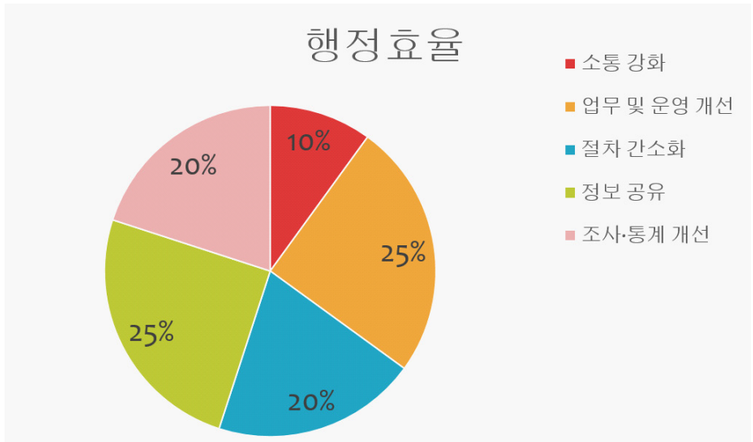
〈표 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자치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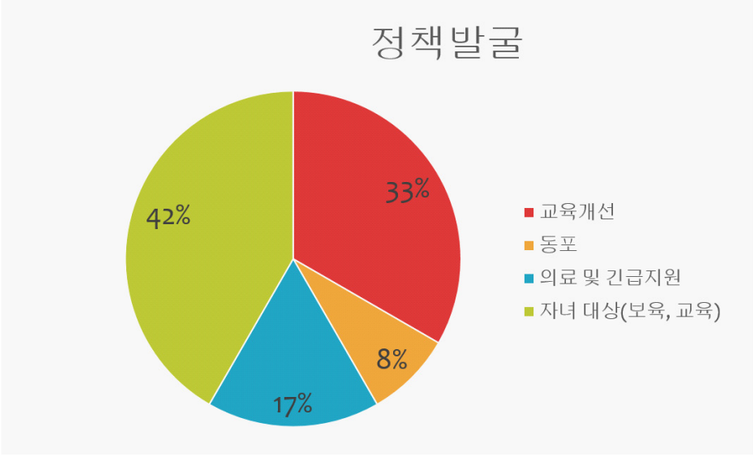
서울(7)	인천(1)	경기도(14)	충남(2)	전남(1)	전북(1)	경남(1)
구로, 종로, 성동, 강서, 서대문, 영등포, 금천	남동	김포, 안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고양, 남양주, 시흥, 용인, 화성, 광주, 포천	천안, 아산	광산	익산	김해

한 연구(조영희 외, 2020)에 따르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협력 결과는 크게 3가지 유형-제도개선, 행정효율, 정책발굴-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 개선 유형은 지자체 외국인주민 정책 및 행정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의 구조적 개선 방안 제안하는 것이다. 행정 효율 유형은 지자체 정책일선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집행(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 제안하는 것이다. 정책 발굴 유형은 지자체 내에서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책의 사각지대 개선 방안 제안하는 것이다. 유형별로 제안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활동 성과 분석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속한 공무원들이 정책수립과 추진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은 크게 해소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공무원 의견 조사

어려운 점	개선방안
1)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추진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	1) 외국인주민 시책에 대한 해외 사례 등을 포함한 공무원 대상 교육
2) 시책개발(수립)은 단체장과 의회의 관심이 중요하나 대부분 저조 →	2) 단체장의 관심과 그에 맞는 예산 투입 등 관심제고
3) 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단체 간 협조체계 미흡 →	3) 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 통합
4) 외국인주민 담당 전담부서 부재 및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업무 분리 →	4)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전담업무 부서 설치
5) 구체적인 통계자료 없어 시책추진에 어려움 큼 →	5) 적극적인 시책을 위해 체류자격별 특성에 따른 외국인주민 정보 공유
6) 법규정 미비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미비 →	6) 관계법령 개정 및 외국인주민 조례 제, 개정으로 적정 예산 편성 및 조항 마련
7) 외국인주민 시책 추진 인력 부족 →	7) 위탁기관의 적극적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
8) 타 지자체와 유사 시책 공유할 기회가 많지 않음 →	8) 상호 비교검토할 수 있는 지표 필요
9) 내국인주민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고, 다문화수용성 부족 →	9) 외국인주민 시책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이와 같은 이유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 정책의 비중과 실제 담당공무원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불일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실상 지난 15년간 중앙-지자체 간의 협력에 관한 정책과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매우 미미했다. 앞으로 5개년의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 시기(제4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는 지금보다 더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중점과제 개발이 현실적으로 시급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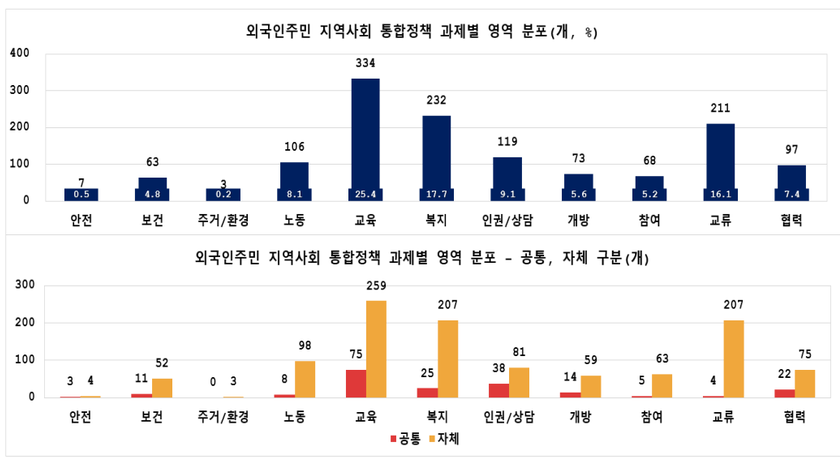
제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 ➔ 직간접적 과제 부재
제2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 ➔ 직간접적 과제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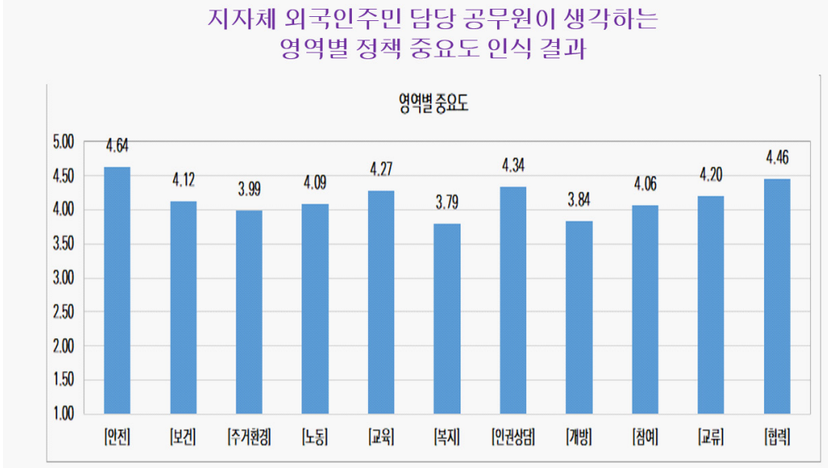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 ➔ 직간접적 과제 일부 포함

-2-3-2-2: 집중거주지역 환경 개선(법무부, 행안부)
- 2-4-1-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활동 기회 확대(행안부)
- 2-4-1-3: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및 한국사회 성공 사례 발굴 홍보(법무부)
- 2-4-2-1: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법무부)
- 2-4-2-2: 지역 특화형 서비스 모델 개발(법무부)
- 5-2-2-1: 중앙, 지자체 협의회 구성(법무부)
- 5-2-2-2: 중앙, 지자체 협업 및 교류 강화(법무부)
- 5-2-2-3: 지자체 역할 및 인프라 확대 추진(법무부)
- 5-3-1-1: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에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기회 확대(법무부, 행안부)
- 5-3-2-2: 외국인정책 관련 지자체 담당자 정책정보 공유 온라인 정책시스템 구축(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 ➔ 중앙-지자체의 관계/역할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 10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공무원 의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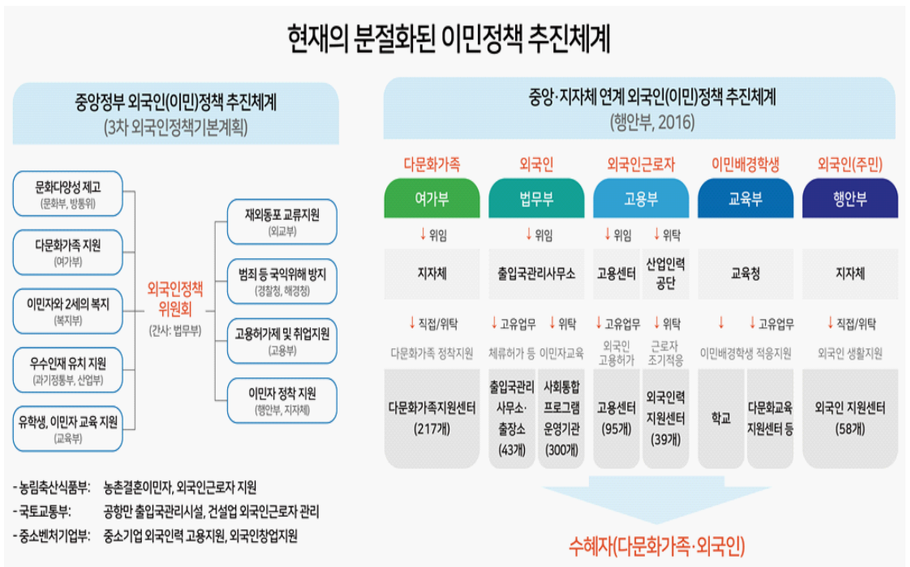


***조사 대상: 27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기초단위 지자체(시, 군, 구)의 외국인주민 담당공무원(조영희. 2020)

4. 실효적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위한 입법정치의 기능과 역할

현재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다만, 2022년 5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특별지원법 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의 요건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구위기가 지역소멸위기로 가시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균형적 발전'이 더욱 시급한 정책현안으로 부상하였고, 의회와 정부에서 관련한 입법과 정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외국인 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관여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입법정책 이슈이다.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중앙 집중적 통치방식을 한 번에 분권적 통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 시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현실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분절화 된 중앙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는 여러 중앙정부의 각 소관법률로 구분되어 있고, 지자체 수준에서 실제 정책을 집행해야 할 때,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피로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별 이민정책 추진 내용

중앙부처 (보조 기관)	정책대상	정책위원회	소관법률	집행기관	집행기관 성격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 (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정부조직, 준정부조직 (민간위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고용센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정부조직, 준정부조직 (민간위탁)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준정부조직 (민간위탁)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대사관, 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정부조직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 규모의 급증과 유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이민 관련 법•제도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법•제도의 유연성은 이민정책 과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 법은 다양한 유형의 국내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그리고 행정적 관할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제정된 이래로 단 한번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지난 10여년 간 외국인정책 추진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행정 업무에서 외국인주민에 관한 행정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권한의 위임, 추진 인력과 예산에 관한 인적, 물적 지원에 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주민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연합협의체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지자체 관할 외국인주민센터 운영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사안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실상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기에는 이민법제도 변화가 시급히 필요했으나, 그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민법령 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로는 2019년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설정하고, 2020년에 통합이민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여전히 대부분의 시급한 법제도 개선이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입법정치의 역할과 기능은 현재의 분절적인 관련 법체계를 하루 빨리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민법제도의 개선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른 법제도에 비해 더욱 민감하고,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및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루려면, 국민의 인식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유의하고 설득하면서 상황에 따라 개정의 속도와 수준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가칭 '통합이민법'을 구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정부 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 법률 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정책추진체계 및 정부•기관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입법의 쟁점은 이민정책 대상에 대한 법적 용어 정립에 관한 문제이다.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정의되는 서로 다양한 정의 방식에 대한 정교한 입법관점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래에서는 현재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이민정책 대상 용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정기선 외, 2021).

〈표 10〉 출입국 및 체류관리정책 관련 법령에서 정책대상 용어 정의

법규 [소관부처]	정책대상 지칭 용어	용어정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법무부]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제2조제2호)
재외동포법 제2조(정의) [법무부]	재외동포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재외국민") (제2조제1호)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제2조제2호)
재외동포법 제3조 (적용범위)	재외동포 체류자격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 동포의 정의)	외국국적 동포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시행령 제3조제1호)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시행령 제3조제2호)
외국인고용법 제2조(외국인근로 자의 정의)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11〉 재외동포재단법과 고려인동포법에서의 정책대상 용어정의

법규 [소관부처]	정책용어	용어정의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정의) [외교부]	재외동포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제1호)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제2호)
고려인동포법 제2조(정의) [외교부]	고려인 동포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1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정책대상 용어정의

법규 [소관부처]	정책용어	용어정의
외국인처우법 제2조(정의) [법무부]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제1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제3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외국인처우법 상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상 출생, 인지, 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1호의 가) 국적법 상 인지, 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상 출생, 인지, 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제1호의 나)
	결혼이민자 등[19]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외국인처우법 상 결혼이민자(제2호의 가) 국적법 상 귀화허가를 받은 자(제2호의 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13〉 행정안전부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서의 정책대상 용어정의

법규 [소관부처]	정책용어	용어정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지침 [행정자치부] 제2조 (용어정의)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거주외국인	○○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인가정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
	외국인지원단체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5조 (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1. 외국인 2.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표 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현황

조례 명칭		단체수	지방자치단체 예시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8	경기,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8	경기,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시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9	강원, 경북, 대구, 서울, 세종,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시도)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조례	2	경기, 전북
	(시도) 외국인주민 건강증진조례	1	광주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활성화) 조례	17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군구) 외국인주민지원조례	74	강화군, 거제시, 거창군, 경산시 등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	137	가평군, 강진군, 거제시, 고령군 등
	(시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68	강릉시, 경주시, 계룡시, 고성군 등
	(시군구) 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	67	가평군, 강진군, 고창군, 공주시 등
	(시군구)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지원조례	2	상주시, 광주동구
	(시군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2	서산시, 화순군
	(시군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통합) 지원조례	2	여수시, 울주군
	(시군구)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지원조례	2	영암군, 목포시
	(시군구)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조례	5	성남시, 안산시, 광산구, 광주남구, 송파구
	(시군구) 다문화아동·청소년 이중언어교육지원 조례	1	안산시

5. 다문화도시에서 상호다문화도시로의 전환 가능성과 전제조건

제 3차 외국인정책 추진 시기(2018-2022) 중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력의 필요와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칠 영향이 지역소멸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인구, 즉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책은 이제 다문화의 담론을 넘어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야 하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반성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난 15년간 정부가 외국인주민에 관한 수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는 용어가 문화적 다양성 그 자체로 이해되기보다는 차별적 시선이 내재 된 정책용어로 변질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례로,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다문화가족, 다문화자녀, 다문화장병 등으로 지칭하는 정책용어가 그러하다.

최근 기존에 지자체 외국인주민 정책의 기저에 깔린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상호다문화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원래의 다문화주의가 아닌 왜곡된 다문화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상호다문화주의는 여러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상호관계성에 중심을 두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안산시가 2020년 2월 세계에서 137번째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되고, 이후 안산이 상호문화도시로서 추구하는 가치, 목표, 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호문화 도시 지수에서는 100점 중 80점을 받고, 규모가 비슷한 도시 26개 중 4위라고 하니, 이점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아직은 한계를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다문화주의에서 상호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지자체 외국인주민 정책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1) 우리나라는 상호문화 개념을 정책적 맥락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1차 외국인정책(2008-2012)에서 중점과제 중 "다문화사회 이해증진"이 포함되어 있음. 그 후 2, 3차 외국인정책에서는 '다문화'를 정책용어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15년간 추진되어 오면서,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자녀 관련 수많은 사업이 지자체에서 시행되었고, 지자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의 명칭에서도'다문화'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현 상황에서 상호문화 개념을 정책으로 적용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그 동안 '다문화'정책의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지역사회의 다양한 외국인주민, 즉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영주권자, 거주비자 소지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주민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정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상호다문화도시의 가치-평

등성, 다양성, 상호작용, 시민권과 참여-는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특히, 상호다문화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의 노동시장 접근과 통합을 인정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다. 관련 지표로는 도시인구 대비 공공부문 채용비율, 지역 노동인구 중 외국인주민 비율 충원 채용계획 여부, 상호문화 달성을 위한 민간 기업의 외국인주민 채용 장려정책 여부, 고용에 있어 다양성 증진/비차별을 목표로 한 기업, 지역, 국가 단위 연합조직(경영자 총연합)의 유무, 외국인주민이 주류경제, 고부가가치 분야로 진입하도록 사업을 촉진하는 정책 유무, 이민배경 사업가들로 구성된 사업구용, 창업보육센터 지원정책, 외국인주민이 기업가가 함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유무 등이 있다.

이에 지역 수준에서 상호다문화도시의 실현은 도시개발, 도시산업, 도시고용과 일자리 정책 등 다른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외국인주민의 노동시장 접근과 통합 논의를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인주민의 노동과 경제활동에 관한 사회통합 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2) 지자체 도시개발 정책의 맥락에서 상호다문화도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안산시 원곡동은 국경 없는 마을로 잘 알려진 외국인밀집지역이다. 거주민 3명중 2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국내에서 외국인의 밀집도가 매우 높아, 이 지역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특구지정의 목적은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관광 상품화하고, 다문화 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듯,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는 다문화주의에 근거하여, 안산시가 외국인 밀집지역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한 것인데, 상호다문화도시 개념을 도시개발 정책에 적용할 시, 특구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원곡동에 대한 도시재생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 이는 원곡동의 선주민과 외국인의 상호교류의 실질적인 함양 차원에서 필연적이다. 원곡동이 그 동안 특구로서 지역의 관광지로 발전하였으나, 실제로 내외국인이 그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지역개발 정책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안산시의 다문화마을특구가 다양한 문화의 공생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함께 발전하는 '공진화'의 개념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문화마을특구'를'상호문화마을특구'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밀집지역인 지자체가 성공적인 상호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지표가 무엇인가?

상호문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조건은 12개 지표4 중'지속적 시책 추진의지'와 '상호문화 정보와 역량'이라고 생각된다. 공식적으로 상호문화도시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제 이행할 지자체 공무원 역량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2020년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지표분석에 따르면,'지속적 시책 추진의지'는 유사 인구규모 26개 도시 평균점수보다 낮지만'상호문화 정보와 역량'은 평균점수보다 상당히 높은 편임. 이러한 측정 결과가 현실적으로 어떤 맥락적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지표의 실질적 조화가 중요한 것이다.

끝.

/ I /

제 1섹션 토론

토 론 문

조정훈
국회의원



memo

memo

/ II /

제 1섹션 토론

토 론 문

나채목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



memo

memo

/ III /

제 1섹션 토론

토 론 문

김태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memo

memo

/ IV /

제 1섹션 토론

토 론 문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



올바른 이민 정책

1. 다문화 가정 측면(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

지방에는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비율이 30%가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으며, 그에 따른 외국인 아내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이 긍정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의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같은 우대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유럽 지역에는 이민 실패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민자들이 정착한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잘 배우지 못하고 학교를 중퇴하는 등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일들이 매우 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문화가정 2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배우도록 도와서 한국 사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나라와 관련된 많은 기회들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서 2세들이 직업을 가질 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다문화가정 2세들이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고 한국을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근로자 측면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에는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기회로 펼쳐 나가야 된다. 한마디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공장이나 농촌, 어촌, 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정책 및 법률 적용을 통해서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불법체류자들을 합법체류자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세수 확대 등의 도움이 된다. 노동시장을 채울 때는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재외동포(고려인이나 조선족)들에게는 보다 채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외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데 정책적으로 선발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직률이 매우 높은데 한 직업에 일정 기간 종사하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어업 종사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80% 이상이 1~2년 경과 후에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을 어업에 종사하면 합법적으로 다른 직종으로 이직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여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절반 이상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법 테두리에서 허용되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를 워킹홀리데이 같은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취업하는 비율이 3%가 안된다는 데 이들이 지방과 같은 인력이 부족한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이 필요한 업종이 시시각각 변해가는데, 이에 따른 법과 제도도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쉽게 충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가 안되고 합법적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외국인 근로자들도 만족하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고용주들이 쉽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이러한 외국인 정책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제는 대한민국에 '이민청'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명칭을 '이민청'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면 다른 명칭이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감독 기관이 꼭 필요하다. 또한,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체류자를 관리하기에도 업무가 포화 상태이며,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성공적인 이민 정책과 다문화가정 정책은 70년 동안 우리와 길을 달리한 북한과의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이민 정책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확립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 V /

제 1섹션 토론

토 론 문

장한업
이화여대 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 1964년 이 기구가 설립된 이래, 이렇게 격상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고 유일합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인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자부심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기 때문입니다. 발표문 3~4쪽에 나오듯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고,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207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6.5%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국가적 재앙입니다.

한국이 이런 국가적 재앙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외국인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54만 명, 총인구 대비 1.1%였던 외국인주민은 2021년에는 213만5천 명, 총인구 대비 4.1%로 늘어났습니다(행정안전부, 2022). 이 숫자와 비율은 서구 선진국의 그것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50~60년 간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인의 체감도는 결코 서구 선진국 못지않습니다. 단일민족을 기초로 한 과도한 단일의식은 외국인을 함부로 무시, 배제, 차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갈등도 점점 빈번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OECD 국가 30개국 중 한국의 갈등지수는 3위였고 갈등관리능력은 27위로 매우 낮았습니다(전국경제인연합, 2021). 이 갈등은 일단 반발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 한국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외국인주민이 4.1%에 불과한 지금부터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은 우리보다 40~50년 전에 이런 문제로 고심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1964년 외국인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1971년에는 2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점증하면서 그 가족과 자녀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를 두고 막스 프리슈(Max Frisch)는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노동자를 '인적자원'이라기 보다는 '외국인주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 및 정책의 변화의 중심에는 유럽평의회가 있었습니다. 1949년에 설립된 유럽평의회는 1970년대부터 다문화주의에서 상호문화주의로의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영미권의 다문화주의가 평등과 공생을 강조한다면, 상호문화주의는 교류와 상생을 강조합니다.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은 2008년 공동으로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도시는 그 핵심 가치로 평등성, 다양성, 상호작용, 시민권과 참여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표와 86개의 질문을 통해서 도시의 경제, 고용, 교육, 공동체, 문화, 소통, 도시, 환경 등을 점검해 봅니다. 일종의 '도시 건강 검진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는 159개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하마마츠(Hamamatsu) 시가 2017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가입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안산시가 2020년 2월, 구로구가 같은 해 10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였습니다. 발표문 21쪽의 "우리나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안산시가..."라는 문장에서 '유일하게'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에는 "100점 중 80점을 받고, 규모가 비슷한 도시 26개 중 4위"라고 적고 있는데, 이런 점수를 가지고 너무 비교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구로구도 2020년 11월 서울신문에, 87점을 받고 141개 도시 중 1위를 했다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평의회는 이런 가입 도시 간의 비교와 과도한 홍보를 우려해서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은 도시 간의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발표문 22쪽에 보면 "우리나라는 상호문화 개념을 정책적 맥락에서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상호문화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를 다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볼 때, 한국은 여전히 동화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다문화주의는 한국의 정치적, 지리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볼 때 잘 어울리지 않는 주의입니다. 참고로, 다문화주의를 국가 차원에서 선언한 나라는 캐나다(1982), 오스트레일리아(1989) 등인데, 이 나라들은 전통적인 이민국가이고, 연방국가이고, 인구에 비해 영토가 매우 큽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형에 가까운데, 이렇

게 보면 유럽의 상호문화주의가 가장 적합해 보이지만 이 주의의 실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인구가 줄고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지면 향후에는 이 주의의 도입과 실행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상호문화주의를 도입하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는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도시의 주된 문제, 즉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발표문 23쪽에서는 다문화마을특구는 다문화주의에 근거하여 개발한 것인데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적용할 시 특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특구가 안산시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운영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특구가 외국인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둔다는 의미에서 운영한다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호문화도시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이 적절히 섞여서 사는 것을 권장하지, 게토와 같은 외국인만의 밀집현상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발표문 23쪽에 나오는 세 번째 질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밀집지역인 지자체가 성공적인 상호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지표는 무엇인가?”에 대해 ‘지속적 시책 추진 의지’‘상호문화 정보와 역량’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아울러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나 구청장의 상호문화도시로의 발전에 대한 의지와 공무원의 상호문화역량 강화입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 장과 공무원의 상호문화역량은 생각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만약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발전하고 싶으면 지자체 장과 공무원의 상호문화역량을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을 마치면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 정책 포럼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V /

제 1섹션 토론

토 론 문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김포시장)



진정한 다문화, 다문화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날!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1. 다문화 현황

1) 외국인주민수

○ 2021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주민 수는 2,134,569명이다. 이는 총인구 51,738,071명중 4.1%를 차지한다.

*외국인주민

한국국적을 가지지않은자	한국국적을 취득한자	출생한 외국인주민자녀
1,649,967명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210,880명	273,722명

○ 이중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2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수는 891,522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수의 42%에 해당한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선도적 정책을 펼쳐나가고 관련 부처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2)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오래전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주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은 더욱 좋지 않다.

○ 서래마을은 프랑스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에 따른 프랑스 문화가 자리 잡음에 따라 명소가 되었지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해 다니기 일쑤이다.

○ 김포시만 하더라도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를 마련해야 하나, 내 집, 내 아이의 학교 주변에 그런 시설이 생기는 것을 마땅치 않아 하는 것이 현실이다.

2.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1)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 막연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시민대상 홍보 및 교육 필요

◇ 우리의 필요로 인해 외국인을 받아들였음을 인지

○ 외국인주민은 한국인에게 빌붙어 산다?

– 외국인주민에게 여러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 내국인은 막연하게 내가 낸 세금이 외국인주민에게 쓰인다고 생각한다.

– 현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에는 그나마 적극적이지만, 난민을 제외한 외국인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 결혼이민자의 정착, 그 자녀들의 교육, 다문화가족의 가정문제 관리 등 한국인과 관련된 외국인주민만 지원하고 있다.

– 예를들어, 결혼이민자가 저소득층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인 시부모를 모시거나, 한국인 부인이나 남편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자 자녀를 키워야 한다. 어떻게든 “한국인”과 관련이 있어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 이렇듯 현재 다문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현재 한국인인 사람들을 위한 것에 국한되어 있다.

– 김포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대부분 한국인이 기피 하는 곳에서 일을 하며 세금을 내고 있다.

– 외국인주민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여러 수단을 통해 시민 대상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 외국인주민은 누가 필요해서 받아들였는가?

– 외국인주민들이 왜 한국으로 이주했는지를 생각해보자. ▲나라가 어렵던 시절 강제 이주당한 동포들이 다시 한국 땅에 정착하기 위해(재외동포) ▲한국사람들로 채울 수 없는 3D업종, 농축산어업 등에 노동력이 필요해서(외국인근로자)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서(결혼이민자)이다.

– 어떤 이유든 우리가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인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2) 미래를 향한 외국인주민 정책 마련

◇ 지역별 다문화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마련

◇ 우리 것을 배우라고만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닌 상호문화 소통

◇ 이주민 주요 거주지역(외국인 밀집지역) 정비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지역별 다문화 실태조사 필요

–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인력보강 등 우리나라에 선하게 작용시키기 위해서는 현 실태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 과거와 현재를 모르고서 어떻게 미래의 개선점을 찾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지역별 다양한 다문화 특색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

– 이에 관련 부처에서는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떤지에 대해 최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라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이 현실화 되었다. 지금의 투자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보존의 가치임을 인지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상호문화로의 다문화 정책

– 다문화는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제 혼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교류를 통한 문화이해,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외국인주민만 우리 사회, 우리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회구성원인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김포시는 2023년 외국인을 통해 한국인이 무언가 배움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음식, 언어, 고유 악기가 아닐까 싶다.

– 서로간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닌, 함께 사는 이웃이 되는 사회를 꿈꾼다.

○ 이주민 주요 거주지역 정비

– 익숙하지 않은 생김새와 문화,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그저 막연히 안전하다, 괜찮다 라고 한들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간 우리는 여러 가지 외국인주민이 저지른 충격적 범죄를 들어왔고, 돈을 벌러 온 외국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돈을 벌어 고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일 것이라는 그럴듯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 경찰청 관계자에 따른면 외국인주민의 강력범죄는 자국인간 외국인 밀집 지역내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내국인 상대 범죄는 거의 없다고 한다.

〈2021년 범죄자 국적 – KOSIS제공〉

(단위:명)

서울(7)	인천(1)	경기도(14)	충남(2)	전남(1)	전북(1)	경남(1)
구로, 종로, 성동, 강서, 서대문, 영등포, 금천	남동	김포, 안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고양, 남양주, 시흥, 용인, 화성, 광주, 포천	천안, 아산	광산	익산	김해

–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이 생겨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싼값에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을 것이고, 함께 의지하며 살 고국 사람들끼리 뭉쳤을 것이며, 우리는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굳이 투자하여,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이다.



안산시 다문화 특구(한국관광공사 제공)



인천 차이나타운(인천시청 제공)

어둡고 위험한 지역이 있다면, 오래되어 낙후된 곳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 거주지역이라고 투자에 인색한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유아, 초등기의 교육은 청소년기의 교육보다 더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기억된다. 정책적으로 어린 시절에 다문화 경험 기회를 준다면,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정착하는 데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 경기도의 경우 2022년 기준 안산, 시흥, 김포, 군포, 포천 등 5개 시가 0~5세, 부천시가 3~5세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특성과 형편이 다르다 보니 지원금액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4년 10개월에서 최대 10년+α까지 대폭 연장하기로 했고, 외국인 근로자 규모도 2022년 6만 9천 명에서 11만 명으로 늘린다고 발표 한 바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아동은 물론이고,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는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 외국인 부모에게서 제대로 배우기 힘든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 함께하는 한국 아이들에게는 외국인 자녀를, 부모가 외국인인 아이, 피부색이 다른 아이가 아닌, 그저 친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이렇게 자란 외국인 아이들은, 미래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위해서도 전국적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시급하며,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국비보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역할

1) 중앙정부, 국회, 학계와의 끊임 없는 소통

○ 학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러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다문화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간 얼마나 연구결과에 귀 기울였는가?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 더 일찍 반응하였다면 지금 훨씬 더 안정된 다문화 사회가 정착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학계와 꾸준한 소통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 그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중앙정부와의 소통 및 제안건의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내외국인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절차 일원화 등 20여건)과 근거법령 제·개정(4건)을 이루어냈다.

○ 하지만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교부세, 외국인지원센터의 복지시설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타 가장 밀접하게 다문화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우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계속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건의해야 할 것이다.

2) 중장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정회원 자격은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또는 그 비율이 3%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만큼 다문화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지자체이다.

○ 다문화에 대한 현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회원도시 확대로 비슷한 다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군별로 관련 연구,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도시, 농업발전으로 또는 결혼이민자가 많아서 다문화 사회가 된 도시 등 그에 따른 차별된 정책이 개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 주길 바란다.

3) '다문화'가 없어지는 사회통합을 위하여!

○ 진정한 다문화 사회란,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는 그때일 것이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 지원, 다문화 특구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와 '다문화'로 구분짓고 있다.

○ '다문화'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완전한 통합을 위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계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 정부와 국회 또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활동을 지지하고, 우리의 제언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협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현황

1) 개요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

○ 구 성 일 : 2012. 11. 7

○ 회원자격

– (정회원)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거주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 (준회원) 외국인주민 1만명 이하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비율 3%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 희망할 경우

○ 목 적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

○ 회원도시 : 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6)	인천(1)	경기도(14)	충남(2)	전남(1)	전북(1)	경남(1)
구로, 종로, 성동, 강서영등포, 금천	남동	김포, 안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고양, 남양주, 시흥, 용인, 화성, 광주, 포천	천안, 아산	광산	익산	김해

○ 임원도시

구분	기간	회장	부회장
1, 2대	2012. 11. 7. ~ 2016. 11. 6.	안산시장	구로구청장
3, 4대	2016. 11. 7. ~ 2020. 11. 6.	구로구청장	시흥시장
5대	2020. 11. 7. ~ 2022. 11. 6.	시흥시장	영등포구청장, 화성시장
6대	2022. 11. 7 – 2024. 11. 6.	김포시장	영등포구청장, 광산구청장

2) 협의회 정회원 가입 대상도시

(총 155개 도시 / ■1만명 이상 39개, ■3% 이상 90개 ■회원도시 26개)

순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도 시 명															
1	영등포구	남 구	달서구	부평구	광산구	유성구	울주군	김포시	홍천군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경주시	김해시	제주시
2	구로구	사상구	달성군	서 구		동 구	동 구	수원시	고성군	옴성군	아산시	군산시	영암군	경산시	창원시	서귀포시
3	금천구	강서구		남동구				화성시	횡성군	진천군	당진시	익산시	나주시	포항시	거제시	
4	관악구	동 구		연수구				시흥시	철원군	충주시	서산시	완주군	완도군	김곡군	양산시	
5	광진구	중 구		미추홀구				부천시	양구군	제산군	논산시	경옴시	무안군	영천시	통영시	
6	동대문구			중 구				평택시		옥천군	보령시	김제시	해남군	김천시	사천시	
7	용산구			동 구				용인시		영동군	홍성군	남원시	진도군	고령군	함안군	
8	동작구							성남시		증평군	예산군	고창군	고흥군	성주군	밀양시	
9	서대문구							안산시		보은군	공주시	부안군	강성군	울진군	창녕군	
10	성북구							고양시			금산군	순창군	화순군	청도군	고성군	
11	마포구							광주시			부여군	임실군	담양군	영덕군	남해군	
12	종로구							포천시			태안군	진안군	영광군	군위군	의령군	
13	송파구							파주시			서천군	장수군	신안군	영양군	산청군	
14	성동구							안성시			청양군	무주군	함평군	울릉군	합천군	
15	중 구							오산시					장흥군		하동군	
16	강서구							남양주시					보성군		함양군	
17	강남구							안양시					강진군			
18								양주시					곡성군			
19								군포시					구례군			
20								이천시								
21								광명시								
22								여주시								
23								동두천시								
24								양평군								
25								가평군								
26								연천군								

memo

memo

memo

memo